

---

#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

2022. 2.



금융감독원

# 목 차

<b>I. 2022년 금융감독 방향</b> .....	<b>1</b>
1. 금융감독 환경 .....	1
2. 금융감독 방향 .....	3
<b>II.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b> .....	<b>5</b>
1.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	5
가.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시스템 구축 .....	5
나.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강화 .....	7
다. 사전·사후적 감독간 균형 잡힌 검사체계 구축 .....	9
2.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	10
가. 빅블러(Big Blur)시대 금융혁신 지원 .....	10
나. 패러다임 전환 과정의 신규 리스크 대응 강화 .....	12
다. 실물 지원 및 금융상품·서비스 다변화 도모 .....	14
3.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	16
가.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 .....	16
나. 금융양극화 완화 노력 지속 .....	18
다.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	19
4.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	21
가.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	21
나. 코로나 19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	22
다.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확충 .....	23

# I. 2022년 금융감독 방향

## 1 금융감독 환경

### 가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

◆ 전반적인 경기회복 흐름 속에서 코로나19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인플레이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① (대외) 코로나19 확산세 정도 및 재정정책 여력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회복 흐름세가 유지\*될 전망

\* 세계 성장률 전망('21<sup>e</sup>→'22<sup>e</sup>) : (IMF, '22.1월) 5.9% → 4.4%, (OECD, '21.12월) 5.6% → 4.5%

○ 주가는 경기회복 흐름 속에서 코로나 확산, 인플레이 장기화 및 통화정책 정상화, 中 성장 둔화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금리는 상승세가 이어지나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 및 빈도, 인플레이 전개 상황 등에 상승폭이 좌우될 전망

○ 대외 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경우 자본유출입이 확대되고, 환율·주가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증폭될 우려

② (대내) 국내 경제는 소비심리 회복, 수출·투자의 양호한 증가세 등으로 3% 초반대 성장\* 전망

\* '22년 성장률 전망:(한은, '21.11월) 3.0%, (IMF, '22.1월) 3.0%, (OECD, '21.12월) 3.0%

○ 국내 금융시장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제약될 전망

- 가계부채 누적, 부동산시장 불안정 등 그간 경제내에 누적된 금융불균형 요인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나 2022년도 주요 리스크요인

◆ 글로벌 요인 등에 따른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디지털화 등 금융산업 구조변화, 격차 심화 및 부채 누적 등 리스크요인에 대비할 필요

### ①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충격, 대내외 자금조달 여건 악화, 취약차주 부실화 우려 등이 증대

### ② 디지털화 등 구조적 변화 가속화

- 빅테크의 금융 지배력이 확대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소비자보호·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취약한 사업자 출현이 증가할 가능성
  -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실상품을 판매·중개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

### ③ 양극화, 고령화 등 사회적 격차 심화

- 코로나19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 등 계층 및 업종별로 차별화된 경제적 충격이 사회적 문제로 고착화될 가능성
  -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함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며 금융서비스 소외 현상 심화 예상

### ④ 가계부채·기업부실 등 잠재리스크 누적

- 그간 금융시스템내 누적된 가계부채 등 민간 금융부채가 대내외 충격을 받을 경우 향후 경기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 대내외 충격에 대한 금융회사의 회복탄력성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 2

## 금융감독 방향

◆ “금융안정·금융혁신·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 실천을 통해 목표 구현

### □ (전략 1)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 ①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시스템 구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부문 리스크 요인 조기 진단 및 선제 대응강화, 리스크 상시감시 기능 강화
- ②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강화) 금융상품 설계·개발단계 감독 강화, 금융상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감독 강화
- ③ (사전·사후적 감독간 균형 잡힌 검사체계 구축)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검사체계 구축, 사전예방적 점검 기능 및 자율규제 강화

### □ (전략 2)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 ① (빅블러[Big Blur] 시대 금융혁신 지원) 혁신금융 부문 감독체계 정립,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지원,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지원 등
- ② (패러다임 전환 과정의 신규 리스크 대응 강화) 디지털 금융의 지속가능성 제고, 디지털 리스크 대응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③ (실물 지원 및 금융상품·서비스 다변화 도모) 은행·자본시장의 실물 지원 기능 확충,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및 연금상품의 노후준비 실효성 제고

### □ (전략 3)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 ①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유도, 금융교육 및 상품 정보 공시강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불법금융행위 대응 강화
- ② (금융양극화 완화 노력 지속)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강화, 취약 차주 등에 대한 금융·위기관리 지원 강화
- ③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공정거래 조사기능 및 역량 강화, 공시 및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도 제고,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 □ (전략 4)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 ①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유도, 기업부문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분석
- ②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지원,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
- ③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확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 (목표) 금융안정·금융혁신·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

## 2022년도 금융감독 방향

# “ 금융안정 · 금융혁신 ·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 ”

리스크요인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b>1.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b> 가.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시스템 구축 나.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강화 다. 사전·사후적 감독간 균형 잡힌 검사체계 구축
디지털화 등 구조적 변화 가속화	<b>2.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b> 가. 빅블러(Big Blur) 시대 금융혁신 지원 나. 패러다임 전환 과정의 신규 리스크 대응 강화 다. 실물 지원 및 금융상품·서비스 다변화 도모
양극화·고령화 등 사회적 격차 심화	<b>3.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b> 가.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 나. 금융양극화 완화 노력 지속 다.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가계부채·기업부실 등 잠재리스크 누적	<b>4.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b> 가.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나.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다.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확충

## II.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 1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 가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시스템 구축

◆ 리스크요인 조기진단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대내외 소통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 강화

#### ① 리스크요인 조기진단 및 선제 대응 강화

#####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부문 리스크 선제 포착·대응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자산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향후 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 (예) 대출채권 규모 및 연체율 동향,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 지방은행의 PF 집단대출 중심 수도권 영업확대에 따른 잠재부실 위험 등

○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中 부동산 불안 등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 외화유동성 및 대외 익스포저 현황 등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 대응

- 특히, 非은행(증권·보험) 외화유동성 관리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상향

○ 非은행 금융중개의 비중 확대에 의한 신용팽창 등 非은행권 중심 규제 사각지대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 점검

\* (예) 제2금융권 및 증권사의 부동산 법인대출, 지급보증 등

##### □ 리스크 조기진단 인프라 확충

○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시나리오 분석 및 모형 등을 고도화\*하고, 거시경제 전망 및 개별업권 특성 등을 모형에 정교하게 반영

\* (예) 위기상황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요인의 파급효과를 모형에 추가 고려, 증권·보험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등

○ 금융산업 위험평가 간편지표(Handy)의 위기감지 능력 제고를 위해 지표 및 등급구간 조정\* 추진

\* (예) 위험등급 구간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설정되어 위기감지력이 떨어지는 지표 개선 등

○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위험 상황판(Risk Dashboard)의 기능을 확충\* 하고 정보공유 및 관리 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예) 현재 조기경보모형, 금융산업 핸디지표, CAEL 지표, 거시금융 안정성(경기 대응완충자본)으로 구성된 위험 상황판에 시장·경제 지표 등을 추가

## ② 리스크 상시감시 기능 강화

### □ 유관기관 및 금융시장과 소통 강화

- 시장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요인을 실시간 파악\*하여 이를 유관기관 등과 공유하고, 필요시 공조 대응체계 즉시 가동

\* (예) 글로벌 위험요인 밀착 모니터링, 해외감독당국 및 국제기구의 대응방안 파악 등을 위한 글로벌시장국과 해외사무소간 협업 및 기능 강화

- 금융회사 측 정보 채널 담당자(소통협력관, Liaison)를 회사별로 지정하여 담당 검사팀 등과 금융회사간 업무미팅·면담 활성화

- 금융회사 외부감사인과의 정례협의를 확대 실시하고 외부감사인과의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검토

\* (예)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불가하고, 금융감독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외부감사인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구조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 금융회사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 다수 금융권역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리스크 요인\*을 포착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원내 상시감시 정례회의 신설·운영

\* (예)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급증, 권역간 쏠림현상 등

- 자금흐름 분석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이상징후와 권역별 금융회사 상시감시 간의 연계성 강화

- 부동산 등 리스크 취약부문과 권역별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① (부동산금융)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통합관리시스템을 쏘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상시감시\*\* 강화

\* 현재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에만 한정

\*\* 부동산 PF사업장별 사업진행 상황 및 PF대출·지급보증 등 여신현황 관리

② (보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요인 및 부실징후를 사전 파악하는 위험지수 개발 추진

③ (자산운용) 펀드규제 신설, 사모펀드 급성장 등에 대응하여 자산운용 상시감시 시스템을 펀드 관련 데이터 통합 인프라로 고도화

④ (상호금융)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합의 리스크요인을 분석·평가하여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체계 구축

\* 재무정보, 건전성 정보, 준법성 정보 등



## 나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강화

◆ 금융상품 개발, 판매, 사후관리 등 쏠 과정에 걸친 상시감시 및 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 ① 금융상품 설계·개발단계 감독 강화

#### □ 금융상품 심사 및 자율검증 강화

-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금융상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 강화
  - 심사기준에 ① 과도한 마케팅 ②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마련 여부 등 추가
- 금융회사 상품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및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 기준 준수여부 평가 등을 통해 금융상품 자율통제 강화 유도
  - \* (예) 금융회사 상품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방식 및 관련 부서간 견제기능 등을 평가
- 과도한 보험상품 개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상품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협회내 신상품협의기구의 실효성 제고\*
  - \* (예) 제3보험(질병·상해·간병)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내 의료·소비자보호 전문위원을 확충하고 논의내용을 충실하게 기록·관리하는 등 심의기능 강화

#### □ 금융상품 등의 약관 개선·보완 추진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업권별 약관을 비교·분석\*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유도
  - \* (예) 각 금융권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약관 개선사항 검토
- 전자금융업자가 연계·제휴 서비스 제공시 소비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약관 등 개선
  - \* (예) 빅테크와 제휴 상대방간 업무책임 범위, 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을 알기 쉽게 구성
- 약관의 원칙적 사후보고제 시행(20.1월)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사항\* 등을 발굴하여 보완방안 검토
  - \* (예) 저축은행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한 표준약관 개선 등

## ② 금융상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을 통해 제조·판매·사후 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쉰 단계의 불완전판매 요인 점검
  - \* 제조(금융상품 손익구조, 수수료, 기초자산 등 상품구조), 판매(투자자·연령·회사·채널별 판매 실적 등), 사후관리(주요 특이사항 및 민원) 정보 등을 종합
- 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용한 신규 지표를 발굴·반영하고, 분석기능을 보완하는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추진
- 원내 금융상품 모니터링 협의체\* 및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금융상품 동향점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상품 통합 모니터링 강화
  - \* 상품별 감독·검사 및 소비자보호 유관부서 등을 중심으로 구성
  - \*\* 금융상품을 설계·판매하는 금융회사,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
- 보험계약 부당전환,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보험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 고도화
  - \* (Consumer Protection Monitoring System) 민원 발생률,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보험금 부지급률 등 보험 소비자보호 지표를 분석하여 이상징후 포착 → 보험회사에 취약부문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미흡한 회사에 대하여는 현장검사 실시

## ③ 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감독 강화

- 금융민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원정보 관련 이상징후를 신속히 인지하고, 감독·검사업무에 활용도 제고
  - \* 민원 신청서, 민원 첨부서류, 민원 상담내용 등 금융민원 관련 종합정보
- 불건전 영업행위 의심지표\*, 민원·제보 사안 등을 분석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현장검사 실시
  - \* (예) 안정형/고령투자자의 고위험펀드 가입현황, 보험상품 조기해지율·청약철회율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서 새로이 도입된 불완전판매 예방제도\* 등의 금융현장 정착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 (예)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녹취·숙려 제도 등
- 독립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도 도입 및 高수수료 판매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판매책임 강화 방안 등 검토\*
  - \* (예) 보험회사의 GA 관리체계 강화, GA의 자체 내부통제 개선 유도 등

## 다 사전·사후적 감독간 균형 잡힌 검사체계 구축

◆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더하여 사전적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개편하고 사전예방적 점검과 자율규제를 활성화

### ①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검사체계 구축

□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주기적인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

\* (정기검사)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범위 등 차등화  
(수시검사) 사고, 리스크요인 등 특정 사안에 대해 필요에 따라 기동성 있게 실시

○ 금융의 대형화·복잡화 추세에 맞춰 검사범위를 금융회사별 핵심·취약부문 위주로 차별화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 제고

- 상시감시에서 파악된 취약부문을 현장검사와 연계하여 사전예방과 사후처방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검사환경 조성

○ 다만, 금융회사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

□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에 맞게 전면 정비\*

\* (기본방향) 평가항목별 유효성 평가 및 정비, 비계량항목의 평가근거 구체화 등

□ 보다 신중한 검사처리 및 제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소통절차\*를 개선하고,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내부 협의체 운영

\* 경영진 면담의 탄력적 실시, 감사의견서 조기교부, 검사국장의 직접 의견 청취 등

### ② 사전예방적 점검기능 및 자율규제 강화

□ 상시감시결과 다수 권역에 걸친 공동 리스크요인을 종합·분석하고, 권역간 기획·협업검사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 신속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제도\*'를 도입·시범실시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 계획(안) : 자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금융회사 감사 실시 → 이사회·금감원 보고 →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회사 자체조치사항을 수용하되, 감사부실·허위보고시 직접 검사

## 2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 가 빅블러(Big Blur) 시대 금융혁신 지원

◆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건전한 시장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독체계 정립

#### ① 혁신금융 부문 감독체계 정립

-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종자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
  - 최근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NFT 등 디지털자산의 소비자피해 유발요인 등을 점검
- 인공지능(AI) 금융서비스가 안정성에 기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유형\*별 특징을 반영한 실무지침 마련
  - \* (고객응대) 챗봇, (심사·평가) 신용평가, 대출·보험 심사, (위험관리) 사기거래탐지 등
- 안전성과 효용성이 검증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내실화 도모
  -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 부가조건 이행현황 등 대상

#### ②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지원

-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에 대응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지원 등을 위한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방안 검토
  -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빅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도록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 검토

##### ※ [예시]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 검토사항

- ① (금융지주)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정비
- ② (은행) 부수·겸영업무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
- ③ (보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 사고 보상체계 등 제도적 기반 검토
- ④ (자산운용) 사모펀드 취지에 맞는 운용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감독방안 검토
- ⑤ (저축은행) PF대출 자기자본 요건 등 리스크 대비 과도한 규제 정비방안

### ③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지원

-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건전성, 공시 및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감독방안 마련
  - \* BIS와 IOSCO는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을 수립하여 FSB 회원국에 동 원칙의 채택 권고  
→ '25년 각국의 준수여부 평가(peer review) 예정
- 상장주식의 新 거래플랫폼인 대체거래소(ATS\*)의 설립과 관련하여 인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 \*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 '22.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 보고 정보를 활용하여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리스크 분석 방안 마련
-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기관과 금리 제출기관에 대한 감독방안을 수립하고, 다양한 KOFR 연계상품 출시 지원
  - \*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21.11.27.부터 공시

### ④ 자산운용업 등 진입·등록 관련 심사절차 효율화

- 투자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등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등 관련 진입·등록 심사절차 차별화
  - 기존 운용사의 신속한 사업재편·신규업무 영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가·승인·등록 등을 Fast-Track\*을 통해 우선 처리
    - \* '21.10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경영참여목적의 사모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출자승인(일반사모) 및 업무집행사원의 등록(기관전문사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등록신청이 급증한 투자자문·일임업자 및 외국펀드의 경우 등록 요건 충족 완비건 우선처리 등 심사절차 개선\*을 통해 소요기간 단축
    - \* (예) 세부 등록요건 사전안내 확대 및 미비 신청건 후순위 배정을 통한 자발적인 개선 유도, 기관투자자 대상 외국펀드 심사 간소화, 자문·일임업자 실지점검 효율화 등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시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하는 경우와 동 회사가 아닌 자가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Two-Track\*\*으로 신속하게 처리
  - \* '21.12.30.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CVC) 설립 가능
  - \*\* 대·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위한 일반지주회사 CVC의 경우 신속 심사

## 나 패러다임 전환 과정의 신규 리스크 관리 강화

- ◆ 디지털화, 기후·환경 등 금융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신규 리스크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① 디지털 금융의 지속가능성 제고

- 지속가능한 전자금융업 관리체계 확립
  -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
  - 간편결제 확대, 新유형 결제서비스 출현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감독방안 마련
- 건전한 데이터산업 정착 지원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초기 소비자 중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
    - \* (예)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 운영의 적정성,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통제권 보장, 과도한 경품 제공 등에 대한 점검 강화
  -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지원을 통해 데이터 활용 수요 확대 대응
    - \*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

### ② 디지털 리스크 대응 강화

-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 거래규모, 신규사업 진출 등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 IT리스크 계량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신설 증권사, 중소형 저축은행 등 취약 우려 회사에 대한 IT 운영 실태 중점 점검
- 디지털 전환과정의 신규 리스크 자체 점검 강화
  - 탄력(Agile) 조직 구축\*, 메타버스(Metaverse) 도입 및 제3자 업무위탁\*\* 등 디지털 전환과정의 신규 리스크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 유도
    - \* 탄력(Agile) 조직 도입에 따른 업무통합, 서비스 개발 과정의 보안·운영 리스크
    - \*\* 클라우드 이용, 핀테크 연계 등 제3자 업무의존도 심화에 따른 집중 리스크



### ③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투자 및 거래 감독 강화

- 플랫폼을 활용한 실물자산 소유권 분할 판매 등 신종투자 관련 상시감시 및 투자자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독 강화
- 증권사가 해외주식 중개, 특판상품 출시 등을 위해 플랫폼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등 감독방안을 검토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감시체계 구축방안 검토

#### □ 신규 판매채널·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위험요인 점검

-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비대면 판매 등 신규 판매채널의 위험요인\*을 점검
  - \* (예) 온라인 화상 상담 시스템, TM 계약 시 실시간 미러링(설명내용 화면 제시) 서비스 등
-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가상영업점의 불완전판매 예방 강화

### ④ ESG 관련 감독체계 정립

#### □ ESG 관련 공시·평가 절차 개선

- 글로벌 ESG공시기준 논의 등을 감안하여 국내 공시기준을 검토하고, ESG채권의 평가시 준수할 기준, 평가서 공시방법 등의 마련을 검토

#### □ ESG 금융상품의 생애주기(Life-cycle) 맞춤형 감독 실시

- ESG를 표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전략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테마검사 등을 통해 사후점검 실시
- ESG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상품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ESG 투자비율 등 상품공시 제도 정립

#### □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방안 마련

- 은행에 대한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서'를 개선\*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후리스크 관련 감독방안 연구

\* BCBS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 원칙」 활용

## 다 실물 지원 및 금융상품·서비스 다변화 도모

- ◆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확충을 통한 실물부문 자금공급 및 금융상품·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한 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

### ①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 확충

#### □ 은행의 자금중개 역량 제고 유도

-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 산정방식\* 등 유동성 규제를 개선하여 실물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를 지속 유도

\* 은행이 한국은행에 제공한 차액결제 이행담보 중 미사용분을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여 고유동성자산 확보 부담을 완화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상 자금공급 활성화\* 추진

\* 현재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대출 취급이 가능하나 예대율 관리 등으로 취급실적이 없음

#### □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SPC를 통한 투자 현황 점검 및 필요시 SPC의 보유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금융투자업자의 중소·벤처기업 자금중개·지원제도\*를 종합 비교·분석하여 자금지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초대형 투자은행(IB),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 등

- 탄소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다각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추진

\* (예) 순자본비율 산정시 탄소배출권 위험값 완화 등

### ② 금융상품·서비스 다변화 도모

#### □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추진

- 자산운용회사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모펀드 상품 개발 지원

\* (예) 펀드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활용이 저조한 사유 및 문제점, 심의기간, 부여기간 및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 검토



- ETF 시가 상승 등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투자부담 완화 및 펀드의 지속성 제고 등을 위해 **ETF 액면분할제도\*** 도입방안 검토

\* 현행 자본시장법상 회사형 펀드가 아닌 신탁형 ETF 액면분할 관련 규정 부재

- 국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자산관리 특화상품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계전용 장기신탁상품\*** 활성화 방안 검토

\* (예) 결혼·육아지원 → 자녀교육 → 노후생활비 → 유언대용 신탁 등

#### □ 연금상품의 노후준비 실효성 제고 지원

- 유병력자들이 일반 연금상품보다 연금액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유병력자 연금 등 연금상품 구조 다변화 방안 마련
-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 도입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공유·협의
-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 세제지원 확대, 보조금 제도 도입 필요성 등 검토

#### □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편의성 제고

-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을 통해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증가 방지
- 공·사보험 협의체 등을 통하여 비급여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보건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협의\*

\*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표준코드 사용 의무화 및 정의 마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필요항목 발굴, 불법광고·부당청구 등 부당 의료행위 신고 등

-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약전환 방안\* 도입 추진

\* 보험설계사(대면)를 통하지 않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상품으로 전환 가능

### 3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 가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

◆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금융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보호와 피해 구제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로운 금융생태계 조성

#####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유도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6대 판매원칙\* 운영현황을 평가·분석하고 동 결과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등 개선 추진
  -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부합하는 투자상품 위험등급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 기초자산의 변동성, 신용등급, 상품구조의 적합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고려
-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자율진단을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반영한 세부 평가기준 마련
  - \* 74개 평가대상회사를 총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3년간 평가 실시

##### ② 금융교육 및 상품정보 공시 강화

-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중·고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 \* (중등) 현재 7개 학교에서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여 시범운영 중 (고등) '21.11월 교과개편안에 따르면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과목으로 포함 예정
  - 우수 금융교육 콘텐츠 인증, 강사 DB 운영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교육 집행 업무 충실히 수행
-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공시 강화
  -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의 금융상품 비교공시 정보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추진

### ③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불법금융행위 대응 강화

#### □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내실화

##### ○ 민원·분쟁처리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 민원·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민원 예방 및 신속한 민원 처리 추진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의료적 쟁점 등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

\* (예) 현재 법률전문가 중심 → 의료, 금융·경영·경제 전문가 등을 확충

\*\* 전문가가 사안별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 ○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시스템 개선 추진

- 모바일 민원신청 시스템 및 챗봇 서비스 구현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선제 대응

##### ○ 불법금융행위 대응 역량 확충

- 연령·성별 등에 따른 맞춤형\* 보이스포싱 피해예방 안내 강화

\* (30~40대)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빙자형 사기, (50~60대 이상)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을 주기적으로 안내

- 은행의 보이스포싱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찰청·은행과 공조·문진제도\* 강화 등을 통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포싱 대응역량 확충

\* 보이스포싱 예방을 위해 500만원 이상의 창구 현금인출송금시 문진표를 작성토록 하는 제도로 문진표 개선 및 예방직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포싱 실효성 제고

##### ○ 보험사기 조사과정의 소비자보호 및 기획조사 강화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조사시 보험회사 준수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통해 자율 규제

-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 기획조사 실시

\* (예) 백내장 수술, 갑상선 암 등 과잉진료,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질병 등

## 나 금융양극화 완화 노력 지속

◆ 금융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비자보호 및 금융·위기관리 지원을 통해 금융양극화 완화 노력 지속

### ①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강화

#### □ 금융소외 계층 대상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 은행 점포폐쇄 확대, ATM 축소 등에 따른 소비자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예) 우체국 등 타기관 창구제휴 지역재투자평가 반영, 캐시백 서비스 활성화 등
- 은행권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축·출시 지원을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 □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선

-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유병자·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지원\*  
\* (예) 고혈압 환자 등을 위한 전용상품, 新항암치료수술비 등 新위험 보장 상품
- 온라인 플랫폼 기반 배달업종 확산 등에 대응한 유상운송용 등 이륜차보험 제도 개편\*  
\* 사고가 적은 플랫폼업체 보험료 할인, 배달라이더 등을 위한 On-Off보험 확대 등

### ②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위기관리 지원 강화

#### □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유도 및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취약 차주 지원방안\*\* 마련

\*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 \*\*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활성화 등

#### □ 인터넷은행이 인가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 및 중저신용자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지원

\* 분기별로 각 은행의 중저신용자대출 목표(비중)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각 은행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

\*\* 비금융정보 및 머신러닝 기법 등을 활용한 중저신용자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 체계 마련 유도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강화 지도

#### □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 실적 등을 점검하고 우수은행 평가기준 개선 및 공시대상 은행 확대 등을 통한 지원 활성화 유도

## 다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 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기능 및 역량 강화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 지속

- 정치테마주 및 상장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공모주 청약 관련 부정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조사 신속 착수
  - 특히, 인력 및 직무범위가 확대되는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조사의 집행력 강화

#### □ 효율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시스템(Cybercop)의 편의성\* 등 개선
  - \* (예) 제보방식을 제보자의 자율기재 방식에서 핵심내용 중심의 체크리스트 작성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보자의 편의성과 제보 내용의 질적 제고
- 지분공시 위반 정보를 조사업무에 상시 활용토록 하고, 증권범죄 조사·수사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강화

### ② 공시 및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도 제고

#### □ 공시정보의 투명성 제고

- 메타버스(Metaverse) 등 新기술 공시 관련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IPO 주관사의 주관업무를 평가하여 주관업무 품질 향상을 도모
- 비금융업의 재무제표 주식사항을 기업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표준화된 데이터로 수집하여 대외 개방

## □ 회계정보의 신뢰도 제고

- 상장 후 실적악화 기업, 계열사간 부당거래 기업 등 분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
- 3개월 내 심사종료\*, 심사·감리 기능 분리, 위험요소·특이사항 등 핵심 사항 중심의 점검 등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 제고
  - \* 위반발견, 기준해석 쟁점, 사실관계 추가확인, 소명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연장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점검 및 감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 유도
- 동일群 내 감사인 재지정 허용 등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및 감사 품질이 높은 감사인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지정제도 개선 추진
-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제도 시행 초기로 자체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회계법인에 교육·전파하여 동 제도의 원활한 시장 안착 유도

## ③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 시장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등을 통한 고위험 투자동향 등을 분석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감독방안 강구
-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상화 및 향후 기준금리 상승 등이 회사채 발행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상환 리스크 등을 점검
-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세 등에 대응하여 개인투자자가 증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방안\* 검토
  - \* (예) 실적이 좋은 기업의 안정적인 배당 촉진을 통해 배당주 장기 투자 환경 마련
-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부 투자자금이 증권사 랩어카운트\*로 이동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 및 비유동성자산 편입 등 운용상 위험요인 점검
  - \* (잔고) ('19년말) 116조원 → ('21.9월말) 149조원 (증가액 : +33조원, 증가율 : +28%)
-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기능·운용하는 유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
  - \* (예)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 리츠, 사모 벤처투자조합 등

## 4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 가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 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따른 상환능력 약화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 ①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 □ 가계대출 관리의 체계화

-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21.10.26.)」을 차질없이 이행
-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관리목표 준수 여부 밀착 점검
  - \* (예) 연간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등
  - 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 대한 충분한 한도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심한 관리 병행
- 최근 급증한 전세·잔금대출 등의 리스크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 □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 마련
  - \* (예) 소득 대비 대출비율(Loan-to-Income)의 활용도 제고 등
-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용도심사 및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관리 강화방안 모색
-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하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高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저신용차주, 高LTV대출,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Rent-to-Interest)이 낮은 대출 등



## ②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유도

-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능 제고\*를 통해 장기존속 한계기업 등 구조적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유도

\* 개별기업의 사업위험 평가시 객관적 계량지표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은행의 관대화 평가 경향 억제

-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 인식할 수 있도록 현행 수시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업 구조조정의 적시성을 제고

\* 현행 수시평가는 부도발생 또는 부도임박 업체에 대해 평가등급을 부실징후 기업(C, D등급)으로 변경하는 역할에 국한

\*\*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식별할 수 있도록 수시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

## ③ 기업부문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분석

-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한 기업부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감내 능력을 점검하고 위기 대응방안 마련

\* 코로나19 확산, 금리·유가 등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상황별 기업부문 영향 고려

- 생산·출하·재고 등의 산업지표, 재무·금융지표, 부채비율· EBITDA/금융비용 등 사전 예측적 리스크관리 지표의 발굴 및 활용을 통해 기업 부문의 잠재 리스크 파악

## 나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착륙 유도

- ① (금융지원 연착륙)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 모색
  - 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추진
- ②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단계적 정상화) 유동성 규제(LCR 등) 정상화시 급격한 대출 축소 등이 없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 마련



## 다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확충

◆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및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 유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강화

### 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 유도

□ **코로나19 장기화 및 취약차주 상환유예 종료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 필요시 취약차주에 대한 은행간 건전성 분류 차이 등을 점검

○ 특히 건전성 취약 또는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및 취약부문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유도

### ②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 **(대형 은행지주·은행)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가 건전성 관리·감독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독 프로세스 구축

□ **(은행지주) 연결기준 원화·외화유동성** 규제(LCR, NSFR 등) 도입 추진

□ **(은행) 파생상품 익스포져 측정방식을 정교화\***하는 등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개선

\* (예) 파생상품의 기초자산군 별로 고유리스크의 민감도, 거래간 상관관계, 만기 등 위험요인을 세분화하여 미래 잠재익스포져 산출

□ **(증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BIS 자본규제** 도입 추진 검토

□ **(보험) IFRS17·K-ICS(신지급여력제도) 시행** 등에 대비한 감독·건전성 기준 및 관련 제도\* 등을 개편·확정하고 보험법규 개정 등의 완료 지원

\* (예)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RAAS)의 평가부문·항목·등급구간 등을 정비

□ **(중소서민)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기준 및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선진화

○ 상호금융 조합 자산규모 및 영업형태를 고려한 감독 차등화 추진

○ 여전사 유동성 관리 모범규준 및 공시확대 방안 정착 유도